

공생발전과 자본주의 4.0, 그리고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정재찬

이명박 대통령께서 지난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공생발전’이란 생소한 개념을 새로운 국정기조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그 정확한 의미나 취지가 무엇인지, 기존의 국정 기조인 ‘공정사회’, ‘친서민 중도실용’ 등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또한 이를 계기로 <자본주의 4.0>(Anatole Kaletsky)이나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Peter F. Drucker) 등 세계적 석학들이 제시한 새로운 자본주의 모델에 대한 관심도 다시 커지고 있다.

보노보 혁명과 공생발전

필자는 ‘공생발전’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면서, ‘보노보 혁명’¹⁾이라는 책에서 본 보노보라는 동물을 떠올렸다. 보노보는 침팬지속(屬)에 속하고 침팬지보다는 작지만 침팬지와 매우 닮아 ‘피그미 침팬지’라고도 불리는 동물이다. 피그미 침팬지는 이기적이고 공격적 성향이 강한 침팬지와 달리, 섹스를 즐기고 같이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평등·평화지향적인 동물이어서 침팬지와는 단판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 책의 저자는 사람의 유전자에는 침팬지와 보노보의 본성이 함께 섞여 있는데, 그동안 너무 침팬지의 본성만이 강조됐다고 주장한다. 자본주의 발전의 원동력이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되었듯이, 침팬지의 속성들만이 강조됨으로서 오늘날과 같은 승자독

1) 유병선 경향신문 논설위원 著 (2007, 도서출판 부키)

식의 경제, '80:20 사회'의 모습을 가져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침팬지 뒤에 숨은 수많은 보노보들이 지금의 자본주의를 '인간의 모습을 한 자본주의'로 바꾸려는 노력, 즉 '보노보 혁명'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한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Steve Jobs)의 기업가적 혁신과 마더 테레사(Mother Teresa)의 자선이 합쳐진 사회적 기업을 일으키고 성장시켜 나가는 사람들의 노력이 그것이다.

공생발전이 추구하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공생발전의 영문 표현은 'Ecosystemic Development' (생태계적 발전)이다. 구성원 간의 자율적이고 유기적인 조화, 균형을 통해 유지·발전되는 생태계의 개념을 국가발전 목표에 도입한 것이다. '공생' (共生)이라는 말에도 악어와 악어새처럼 서로 이익을 주고받는다든 '상리공생' (相利共生)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공생발전은 상호보완성, 자발(율)성, 공동체 지향성, 그리고 개방성과 다양성 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요구는 전세계적 현상

'공생발전'이라는 생소한 조어(造語)를 탄생시키며, 진화된 시장경제 모델을 만들어 가려는 노력은 한국에서만 발생하는 특유한 현상은 아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선진국의 잇따른 재정위기에 대해서 시장/국가, 개발/환경, 성장/분배와 같은 이분법적 패러다임(Paradigm)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전 세계적인 공감대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새로운 대안의 구체적인 형태는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이후의 사회', '창조적 자본주의', '따뜻한 자본주의'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지만, 이들이 가진 문제의식은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즉, 승자독식과 무한경쟁의 신(新)자유주의나 무한정한 재정 투입이 필요한 복지국가 시스템도, 빈부격차나 높은 실업률, 기후변화와 같은 전 세계 공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칼레츠키의 자본주의 4.0은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전제로, 정부·시장 관계의 새로운 정립을 요구한다. 즉, 복잡한 경제현상들이

경쟁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이윤 추구의 동기에 의해 작동된다는 것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을 관리하고 기업들이 바람직한 목표를 추구하도록 인센티브(Incentive)를 만드는 정부의 역할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은 유지한 상태에서, 정부의 역할을 시장을 관리하고 불확실성을 보완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적 의미의 공생발전은 시장경제원리에 바탕을 두어야

‘공생발전’ 역시 자본주의 4.0과 문제의식이나 기본적인 대안에 있어서는 그 방향을 함께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장이나 정부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고 양자가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말이다. 다만, 이미 자유경쟁원리가 뿌리를 내린 미국 등의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까지 정부의 역할이 크고 시장원리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부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은 지양(止揚)해야 할 필요가 있다.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되 시장의 기능을 믿고 존중하는 시장경제원리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한국적 의미의 자본주의 4.0이자 공생발전’이라고 하겠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공생발전이란, 시장의 기능을 존중하되 기업 등 시장참여자가 나눔과 배려, 사회적 책임 등을 다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모두의 건강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공생발전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공정거래 제도가 갖는 의미는 크다. 공생발전이 정치·경제·사회·문화를 아우르는 국가 전체의 목표이자 가치라고 한다면, 공정거래 제도는 경제 분야에서 공생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자 가치이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질서의 정착은 공생발전의 첫 걸음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진입과 경쟁이 자유로운 열린 시장을 조성하고, 대·중소 기업의 동반성장 및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따라서 ‘공생발전’을 위해

새로이 추진해야 할 무엇인가를 찾기 보다는, 그동안 추구해온 정책방향을 흔들림 없이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제위기 이후 회복세에 있는 우리나라 경제가 고(高)물가와 높은 실업률이라는 난관을 극복하고 포퓰리즘(Populism)적 복지주의의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한 시장경제 시스템을 갖추어 경제성장의 온기가 경제적 약자에까지 골고루 미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노력이 절실하다. 이를 위한 공생발전은, 무엇보다도 공정거래의 이념이 사회에 자리 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

